

UAE, 한국 기업에 파격적 조건 제시

靑, 기업들과 성과 공유 추진... "신재생에너지·항만 인프라 등 투자... 한국기업에 특혜·별도 단지 조성"

아랍에미리트(UAE)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아부다비 왕세제의 한·UAE정상회담 이후 한국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UAE에서 거둔 세일즈 외교 관련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 순방 이후 해당기업들에게 설명하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순방을 수행하고 있는 김현철 경제보좌관은 전날 "이번 문 대통령의 UAE 순방에서 여러가지 좋은 성과들이 있다"며 "굉장히 깜짝 놀랄만한 성과가 발표될 것"이라며 기대 이상으로 세일즈 외교 성과가 크다는 것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 순방 일정을 일부 함께했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먼저 귀국했다. 임 실장은 귀국 자리에서 "올해 안에 한국 기업들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현안점검회의에서 UAE 순방 성과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실장은 문 대통령과 함께 한·UAE정상회담 이후 UAE 핵심장관들과 별도의 접견을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 자리에서 UAE측 장관들이 한국 기업에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UAE측이 석유·가스 협력을 넘어 정유·석유·화학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고자 한다"며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도 대대적 투자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했다.

임 실장은 그러면서 "UAE는 항만 인프라



"반갑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이크부대를 방문해 부대원들과 포옹하고 있다.

구축분야에서도 물동량 확대 등을 위해 올해 20억 달러를 투자한다"며 "이 과정에서 한국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러 "한국기업은 특별한 지위를 갖게 될 것"이라며 "한국기업을 위한 별도의 단

지 조성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귀국 즉시 UAE 순방에서 이뤄진 세일즈 외교 성과를 기업들과 공유하는 자리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성엽 "학교 미세먼지 대책 미흡... 추가대책 필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학교 환경 개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은 "지난해 9월 정부차원에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초기세먼지로부터 학교 현장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추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유 위원장의 지적대로 갈수록 대기오염은 심각해지고 있지만, 학교 현장 대부분은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내 공기 정화 설비 설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5월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교의 공기정화 시설 설치율(합급수 기준)은 20.47%에 불과하다.

학교 종류 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22.55%,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18%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체육관이 없는 초중고교 979개교를 대상으로 한 실내 체육시설 설치 사업의 경우도 현재까지 전체의 36.9%인 382개교만이 설치가 완료된 상황이다.

2019년까지 사업을 이어 나갈 예정이지만 나머지 3분의 2가량의 학교에 대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유성엽 위원장은 "어린이나 청소년의 경우 면역력이 부족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실내체육시설이 없어 체육수업을 못할 뿐 아니라, 기본적인 공기정화 시설조차 없어 창문을 열기는커녕 심지어 마스크를 쓴 채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진성 기자

민주당 도당 공천관리위, 여론조사 방식·시기 결정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 여론조사 소위원회(위원장 유충중)는 지난 26일 3차 회의를 열고 공천적합도 측정을 위한 여론조사 방식과 시기를 결정했다.

27일 도당 여론조사 소위원회에 따르면 여론조사는 공천신청이 끝나는 4월1일부터 7일 사이에 실시, 조사 범위는 도내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전 선거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단독으로 신청한 선거구나 기초의원 정수 이내 신청을 받은 선거구는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여론조사 방식으로 당해 선거구에 주소를 둔 유권자를 대상으로 안심번호를 통한 ARS 방식으로 하며, 각급 선거 당 샘플수는 기초단체장 500샘플(전주시장선거 700샘플), 광역의원 300샘플, 기초의원 200샘플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번 공천적합도 여론조사는 중앙당의 지침에 따른 공천적합도 배정에 적용될 예정이며 민주당 당헌 당규에 따라 그 결과는 공표하지 않기로 했다. /김진성 기자

평화 - 정의당 공동교섭단체, 이르면 이번주 결론

조배숙 "개헌협상 시작됐고 지체하는 것 안 돼" ... 이정미 "지방선거 출마자 생기면 난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간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막판 진통 겪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이주 중 결론이 날 전망이다.

27일 평화당과 정의당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양당은 공동교섭단체의 초대 원내대표(등락대표)를 누구로 할 것인지와 현역 의원의 지방선거 차출 등으로 인한 의석수 부족 우려 등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평화당은 원내 의석수(14석)가 정의당(6석)보다 더 많은 점, 다수당으로서 먼저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제안했다는 점을 토대로 초대 원내대표 몫을 차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의당은 공동교섭단체 구성은 의석수 기준이 아닌 당 대 당, 일대일 구도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반박하며 평화당의 제안에 정의당이 고심한 끝에 대응적 결단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조배숙 평화당 대표는 이러한 상황에서 긍정적 결과를 예상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공동교섭단체 구성 추진 작업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한다고 본다. 이 협상은 오래할 것도 아니고 이달

말엔 (완료)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왜냐하면 개헌협상이 시작됐고 지체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밝혔다.

반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평화당의 현 사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평화당 안에서 지방선거에 출마자가 생기게 된다면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논의를 해가는 과정에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평화당 쪽에서 잘 정리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교섭단체 구성 최소 조건인 원내 20석 기준을 딱 맞춘 상황에서 평화당 현역 의원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교

섭단체 구성이 무산되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나온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용주 평화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는 앞서 7대 정책공조제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두 수석은 수일 내 초대 원내대표를 어느 당에서 먼저 할지, 임기 등을 정해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두 수석 간 잠정합의안이 도출되면 각 당에 보고, 인준을 거친 다음 최종합의안이 공개된다. 정의당의 인준 절차인 전국 위원회는 당초 이날 저녁 또는 28일 저녁 예정됐으나 최종합의안 도출이 지연되면서 전국위 일정이 30일 저녁 또는 31일 이후 열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평화당의 경우 이날 장병완 원내대표와 이용주 원내수석의 회동이 예상된다. 오늘 두 사람의 회동으로 공동교섭단체 구성 최종합의안 도출이 종전보다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민중당 이현숙, 전북도의원 선거 출사표

민중당 이현숙 현 전북도의원(비례대표)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도의원 선거에 출마한다.

27일 민중당 이현숙 예비후보는 자료를 내고 "열정 있는 진보, 검증된 도의원의 제가 도의원(익산 제3선거구) 선거에 출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비록 초선이었지만 진보정당 의원답게 혼신의 열정을 다해 뛰었다"며 "단 한명이라도 진보의원이 있어야 도, 익산시의 정치권이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의 시대적 소명을 잊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외고속 터미널의 부송동 이전 추진, 고질적인 악취 등 환경오염 문제 해결, 전북 농축수산물종합유통센터 익산 유치, 농가수당 신설 등을 추진하겠다"며 "노동이 행복한 도시, 비정규직이 없는 전북과 익산을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김진성 기자



이현숙 의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